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1주년 기념식 열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2월 3일 '건축사의 날'로 선포

의무가입 1주년 기념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인터뷰

의무가입 궁극적 목표는 건축사가 있어야 할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의무가입 바탕 위에 개혁의 계기 마련
건축계 상생 통째서만
건축사 일터 생태계 바꿀 수 있어
올해 8월 3일 미가입 회원이 100% 가입
하므로 의무가입 1단계가 완성되며
민간대가 법 개정으로 2단계가 완료될 것
시대적 소명으로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어가야
의무가입 취지목적 되새길 수 있도록
건축계 뜻 모아 기념사업 역시 준비해야
법 개정 국회 심사만 4년,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반신반의했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이 마침내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8월 3일 건축사법 경과조치 종료로 앞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설계 대가, 정당한 대가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획업무와 계획설계, 타 분야로부터의 지속적인 업역 침해, 건축사업무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무한책임, 과도한 심의 및 허가제도 등 현재 건축사업계의 문제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건축사 의무가입이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는 아니나 이것 없이 어떠한 변화도 해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대한건축사협회가 법제화를 추진, 마침내 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본지가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만나 나아갈 길을 물었다.

> 8면 계속

한마음, 한 뜻! 대한민국 건축사!

“의무가입은 건축사 자긍심 회복의 기회이자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드는 초석 될 것”



의무가입 1주년 기념식에서 '한마음 한 뜻, 대한민국 건축사! 2월 3일 건축사의 날. 자성! 회복! 도약!' 대문 퍼포먼스가 이뤄졌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1주년을 맞아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을 비롯해 김만성·이영희·김영수·이의구·이철호·최영집·조충기

명예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서울시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성낙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장, 대외협력단, 지역건축사회, 신입회원 등 건축계 인사 200여 명이 의미 있는 날을 함께 축하했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을 축하하

는 자리인 만큼 기념식은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의무가입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 개정·공포 1주년 기념식은 의무가입이라는 법 개정을 시작했을 때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되돌아보고, 의무가입을 통해 진정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해 의무가입을 반듯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무가입 개정공포를 통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 힘을 모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로 끝내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미래와 목표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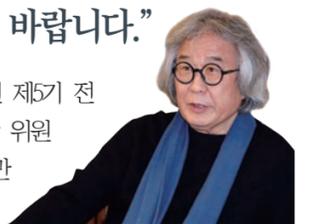
이어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의 위치 확보 ▲K-ARCHITECTURE, 즉 K-건축 시대 개막을 시대 화두로 언급하며 앞으로 협회가 이뤄가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 3면 계속

승효상 건축사 “협회가 건축사의 구심점이자 공론장이 되길 바랍니다.”

의무가입 건축사법이 공포된 지 1년이 지났다. 의무가입은 건축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현안을 개선하고 건축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의무가입 공포 1주년을 맞아 의무가입 필요성에 대

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제5기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이하 승효상 건축사)을 만났다. > 3면 계속



23. 02. 16 (목)

대한건축사협회

57th 정기총회

midas CAD가 대한건축사협회를 후원합니다

5년 사용
300만원
170만원

신입회원은 여기서 추가할인!

www.midasCAD.com | Tel. 1899-9260

사설

수도 없이 신설되는 심의와 규제, 인허가제도 개선해 합리적 행정 이뤄져야

“본 일정표는 건축허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확한 건축허가의 소요시간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프로젝트 일정표에는 상기 문구를 작은 보름 장치로 마련해 놓는다. 건축허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변수들이 빈번히 발생되어 허가의 소요시간이 예측 불가한 것이 현실이고 건축허가의 장기화는 결국 민원인의 사업 손실로 연결된다.

발생하는 변수들 중에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의 재량행위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로서, 허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는 기속행위이다. 그러나 허가권자의 법령 해석에는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량행위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허가신청자와 담당 공무원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유권해석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신이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 담당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어, 제자리걸음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인 판단과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르

게 법령을 해석하여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허가권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법령 해석에 대한 미숙함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현행 허가 행정 절차의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허가제도 개선에서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규정은 2017년 건축법에 신설되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에는 건축허가 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 대해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건축 허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량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 인력의 능력 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와 또 다른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래의 목표 대신 옥상옥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협회가 전면에 나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의견이 상충되었을 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합리적 행정이 이뤄져 건축 환경이 개선돼 더 좋아지길 바란다.

시론

설계의 시작



김지홍 건축사
아우름 건축사사무소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내 건축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설계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의 첫걸음

널리 모르는 일이므로 우리 건축사는 이런 결정에 작게나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과 방향을 건축주에게 제시해 줘야 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시기 또는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 “건축사님,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신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간단하지만 한결같은 대답을 하게 된다. 사실 앞으로도 기회나 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훗날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자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은 지금도, 다음 기회에도 분명히 발생할 문제라고 말이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결국 건축주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인 구조나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건축주도 결국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설계를 시작할 때 결국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상대를 잘 파악하는 처세의 기술뿐만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축사의 능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일들이나 프로젝트가 머리로는 해결 안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진행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기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설계의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매번 상담을 하면서, 건축주의 원하는 니즈나 그 속에서 살아감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된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내 건축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 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설계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의 첫걸음을 명심하게 된다.

요즘 다들 어렵다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 부정적인 단어와 생각들을 자주 듣고 있다. 험난한 길일수록 함께 뛰는 것이 답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건축사의 미래 활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배가되기를 바란다.

힘펠

대한민국 집의 가치를 높인다

Hueven S+
스탠드형 환기시스템

Huezentte Palette
욕실 복합 환기장치

ZEROC P
프리미엄 욕실 환기장치

Hueven EBN
천장매립형 환기시스템

Hueven W
벽부형 환기시스템

Huezentte 2
욕실 복합 환기장치

Huezentte 3

본사 경기도 화성시 안성남로 5 TEL. 1899-0991 FAX. 031-424-0993 쇼핑몰 www.himpellmall.com

▶1면에서 계속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기회”라며 “건축계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뜻을 밝혔다.

김만성 명예회장은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을 모았다”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건축사들의 후원과 성원, 애정이 깃들어야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신뢰 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은 “건축사공제조합도 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협회 의무가입에 따른 신규 조합원들을 위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가입 건축사법 통과에 뜻을 함께 한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박덕흠, 김정재, 심상정, 이현승, 송석준, 최강욱, 김철민, 조용천 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 4년간의 행보 회고
그간의 소회 나눠

의무가입 건축사법은 통과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2019년 첫 발의부터 약 3년, 20대 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됐다. 건축사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겼다. 2020년 10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2021년 6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안건에 올랐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제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월 3일 개정 공포된 바 있다.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공포 기념 식담계 지난 4년간의 행보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외협력단 윤희경 제2기 단장이 주요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윤희경 단장은 “초반에는 건축사들 사이에서도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에 반신반의했던 분위기가 있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공포된 만

큼 앞으로도 건축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무가입,
모두의 힘 합쳐 이뤄낸 결과

법 개정까지 협회는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 이해관계인 등 다수의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었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석정훈 회장이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과정을 공유했다.

석정훈 회장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축사를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는 시선과 추락한 건축사의 위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첫 시작이 의무가입이라고 판단했다”며 “의무가입은 우리가 당연한 시대적 사명이라 여겼고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합당한 대가를 받고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건축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념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당시에는 처절했지만 지금은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한 마음 한 뜻! 앞으로를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시행공포 된 날을 ‘건축사의 날’로 선포했다. 의무가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건축계의 화합도모와 협회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념 공연도 진행됐다. 캘리그래피

별바 작가의 드로잉 공연으로, 건축사의 예술적 성향에 부합하며, 협회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았다. 대북 드로잉 공연은 석정훈 회장, 김영수 명예회장, 신우식·성낙기 이사장이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특별 공연에 이어 기념떡 절단도 진행됐다. 석정훈 회장, 이영희 명예회장, 제31대 시도회장 대표 강영준 부회장, 제32대 시도회장 대표 김재석 회장, 제33대 시도회장 대표 최진태 회장, 대외협력단 대표 김복열 부단장, 신입회원 대표 윤정 회원이 함께 했다.

조아라 기자

인터뷰 승효상 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협회가 건축사의 구심점이자 공론장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 환경 변화에 맞춰 건축사 간 연대 중요해져
협회 중심의 연대로 건축계 현안 해결해 나가야



건축사신문과 대담 중인 승효상 건축사

“의무가입보다 의무가입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은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직능의 분야이자 공공재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다루는 건축사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직능이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건축사협회는 이 윤리를

진작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감시하는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축이 만고에 빛나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삶의 존엄을 지키는
건축의 질적 향상 위해
경계 너머를 보는
건축사만의 시선 필요해

승효상 건축사는 의무가입 1주년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의무가입이라는 목적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건축사의 입지가 예전보다 협소해지는 상황에서 협회가 하나의 구심점 역할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사 간의 연대도 중요합니다. 협회가 건축사와 산업 종사자, 교육 단체 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젊은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건강한 비평과 비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승효상 건축사는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를 바탕으로 건축계 산적인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허가·심의제 개선이다.

아울러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시절부터 의무가입 필요성에 목소리를 낸 만큼 승효상 건축사는 협회의 다음 행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냈다. 당부 뒤에는 건축사가 자유로운 건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배 건축사의 애정 역시 담겨 있었다.

“건축물을 잘라서 무한대의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평면도를 그리는 것은 건축사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평면도는 건축사만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시점을 무한대로 높여서 보는 것처럼 항상 자신을 객관화하고 타자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을 경계 밖 세상으로 내던지는 용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담 홍성용 편집국장
정리 조아라 기자

국가공간정보 쉽고 간편하게...클릭 한번에 건물 연면적·용적률·용도에 공시지가 확인 가능

국토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고도화 완료...‘K-Geo’ 2월부터 서비스



K-Geo 플랫폼 첫 화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누리집상

구현되는 위치기반 지도에 건축물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연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비롯한 용도와 공시가격까지 손쉽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공

간정보통합플랫폼(K-Geo)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마지막 3차 사업을 완료하고 2월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주요 공간정보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확장성의 한계와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산 SW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공간정보

의 융·복합 활용체계를 개선했다.

K-Geo 플랫폼은 ▲정비사업 후보지 분석 등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와 공간분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 지도 ▲경관분석·드론활용 등 3D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트윈 국토 ▲표준분류체계로 분류된 약 2,600여 종의 공간데이터와 통계정보를 자유롭게 내려받기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국토행정업무(측량·지적 등)와 토지행정업무(개발부

담금, 토지거래 허가 등) 지원 서비스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K-Geo 플랫폼 인터넷(kgeop.go.kr)에 접속해 위치기반 건물정보를 클릭하면 대지면적, 건축면적, 총호수 등의 기본적인 건물정보를 비롯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공시가격 등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나아가 구조와 용도, 층별 면적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학회, 글로벌 건축 전문인력 양성포럼...“건축 역할에 걸맞은 지원 뒷받침돼야”

4단계 BK21 사업 전개 과정 조명하며, 신규 평가 대비책도 논의



1월 31일 건축센터에서 글로벌 건축 전문인력 양성포럼이 개최됐다.

건축의 위상과 역할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줄어드는 대학원생, BK21 등 정부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서 건축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신규 평가에 대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건축학회는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센터 강당에서 ‘글로벌 건축 전문인력 양성 포럼’을 개최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문학과 공학, 자연과 물리 등 다수의 학문을 융합해야 하고 통찰력·지혜를 가져야 하는 건축이 최근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폄하되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며 “건축 분야는 대

한민국 역사에서 숭한 영웅들을 배출해 왔고, 건축 환경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제 그동안의 역할에 대한 제자리를 찾는 일이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강현구 서울대학교 교수는 3단계 BK21사업에서 다른 분야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4단계 사업 원안에서 소규모 학문과 함께 기타 중점분야로 분류된 사실을 환기했다.

학회는 입학정원이 6,000명 수준인 건축학·건축공학에 대한 인배와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다른 학회와 연대해 대응을 진행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와는 토론회를 열어 4단계 BK사업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원안과 달리, 수도권 2개 사업단과 지역 1개 사업단이 BK 사업단으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강현구 교수는 “BK사업은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인력양성 지원 사업이자 학과 단위의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한 융합적 학과 발전에 매우 중

요한 수단이다”며 “건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건축 분야 각계 인사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 건축계 차원에서, 미래 인재들을 염두에 두고 BK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건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정량 평가해 인식 개선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도 BK21사업이 학과의 경쟁력 확보 수단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건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소개됐다.

김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무엇보다 건축의 역할에 걸맞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BK21사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BK21의 수혜를 받은 바 있는 김희선 이화여대 교수는 “대규모 융합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축은 전통적 분야이면서 지속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학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BK21은 이런 학문의 경쟁력·특성화를 기대하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로 가치를 부여했다.

노영숙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교육의 내실을 꾀해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국제적으로 투자개발 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획·파이낸싱 등 전반적 산업의 디테일한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 할 때”라고 전했다.

건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화해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자는 주장도 있었다. 윤현도 충남대 교수는 “반도체와 에너지 등은 정부가 인력양성을 주도하고 있다”며 “건축분야 사회적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당국을 설득하고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분리, 학문의 힘 약해져”

이강 연세대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시장논리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그는 “건축은 연간 160조, 토목은 50조 원 규모이고 격차는 3배가 난다”며 “이 같은 시장 원리에 더해 헌법에서도 주거생활의 안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교육당국의 인재양성 정책 개선을 요구한다면 요즘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철우 부경대 교수는 BK21 사업단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학생수가 2배 늘었음을 밝히며, 최근 건축학과 건축공학간의 상호 소통·이해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정철우 교수는 “건축학과 공학이 분리되며 학과 간 점차 교류가 없어지고, 단과대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학문으로서 힘이 약해지고, 오늘날 BK21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최원준·최하진 숭실대 교수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간 공동커리큘럼이 존재하는 교내 상황을 예로 들면서, 토목에 비해 규모는 크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학문적 위상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과도 연계돼 있다고 진단하며, 융복합에 대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2023년도 감사후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후보
오영섭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수상 (2017년 2월)
서울특별시 표창장 수상 (2018년 11월)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수상 (2019년 4월)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06 ~ 23.01 현재)
(현) SH공사 빈집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위원 (2021.01 ~ 23.01 현재)

(전)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2021.03 ~ 23.01)
(전)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2018.04 ~ 21.03)
(전)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위원회 자문위원 (2020.04 ~ 21.03)
(전)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2021.04 ~ 22.03)
(전) 건축사등록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9.04 ~ 20.03)
(전) UA 2017 서울세계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재정위원장 (2017.02 ~ 19.12)
(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감사 (2018.03 ~ 20.04)
(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이사 (2017.04 ~ 18.03)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사회 회장 (2015.01 ~ 17.01)

2023년도 감사선거에 ‘오영섭 건축사’ 단독후보 2월 23일 제57회 정기총회서 선거

대한건축사협회는 1월 27일 2023년도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선거 후보자로 오영섭 건축사(지우 건축사사무소)를 최종 공고했다. 감사선거는 2월 23일 제57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오영섭 감사후보는 “미래 10년을 준비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더불어 완성하는 협회 ▲상생과 공유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협회 ▲대전

환의 시대에 변화와 혁신하는 협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경력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사회 회장,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 및 감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SH공사 빈집매입 및 활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영호 기자

지난해 땅값 상승률 6년 만에 최저 2.73% 올라...상승률·거래량 줄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폭 축소...시장 흐름 경색돼

세종, 경기, 서울,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했지만 21년 연간(4.17%) 대비 1.44%p가 하락했다. 땅값 상승 폭은 2015년(2.4%)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지가변동률을 발표했다. 수도권(4.78%→3.03%)과 지방(3.17%→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세종(7.06%→3.25%) ▲경기(4.31%→3.11%) ▲서울(5.31%→3.06%) ▲부산(4.04%→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지가는 자금조달 부담,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로 인해 22년 하반기부

터 상승 폭이 축소되며 경색된 시장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토지 거래량도 33% 줄었다. 22년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km²)로 전년 대비 33%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km²)로 이 역시 전년 대비 22%가 줄었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순수 토지 거래량 역시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조아라 기자

경제학, 법률적 측면에서 생각해보기 : '건축의 공공성'

건축은 공공재인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건축기본법 제3조)>



경제학에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을 갖춘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비경합성은 누군가 단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며, 배제불가능성은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내지 않는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말한다.

경제학은 공공재와 사유재를 구분하고는 있지만, 정작 설명하지 않는 것이 있다. 공공재와 사유재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할 수 있는지와 배제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이 본질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특성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다. 공공재를 규정하는 배제성·경합성 여부가 갈갈이 나눌 수 없는 모호함을 가진 이유다.

건축은 공공재(公共財)인가를 질문해 보면, 건축이 가진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측면에서 살펴볼 때 과연 그러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건축에 대한 대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사회가 요구하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건축서비스 제공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반대로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풀어보면 어떻게. 건축 분야에 기존에는 개별법만 존재했으나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이념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별도로 제정된 법이 '건축기본법'이다. 2007년 제정돼 이듬해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이 공공재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한 법으로 평가받는다.

연한 법으로 평가받는다. '기본법'임을 명시한 것이라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 성문법에서 국가 최고·기본법인 헌법이 있고, 이러한 헌법에서 여러 법령의 종류와 그 근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기본법은 무엇보다 건축이 갖는 '공공적 가치'에 주목한다.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이 법은 건축을 통해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위한 건축정책 기본방향을 제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건축기본법은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법에 따르면, 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국민의 안전·건강과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우수한 건축디자인 선도, 건축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건축기본법,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건축의 ①생활공간적 공공성

②사회적 공공성

③문화적 공공성 설정

생활공간, 공적 공간,

문화유산으로서

공공적 가치 구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공동 노력 필요하다는 점 강조

"건축은 공평하게 혜택받는

공공재"

이런 국가의 책무가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에 담겨 있다.

또 국가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제6조). 때문에 건축법, 경관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을 신중하게 다뤄야 할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되므로 국가와 사회가 이를 보호하고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공간연구소가 수행한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 연구(2016년)'에 따르면 건축의 공공적 가치는 매우 주관적·가변적 기준으로서, 최근 그 가치 범위가 지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인지, 정부인지 또는 사적재화인지 공공재인지를 선별리 단정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최근 2021년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판결 등 대법원은 판결요지를 통해 '건축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은 '건축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장영호 기자

사항을 규정한 건축사법 등 국가 건축 관련 법체계를 이루는 모든 법률은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에 부합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보면, 엄격하기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법은 제1조 첫 문장을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로 시작하며 "건축창작, 시공의 질,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과 도시경관 및 건축자산의 존중은 공익이다"고 천명한다. 건축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

<건축기본법 제7조~제9조>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H, 건축 설계공모 사전예고...서울 신길·방학역 등 7개 복합사업

작품접수는 3월 17일, 심사는 3월 22일부터 시작

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공모'에 대해 사전예고했다. 예고된 공모는 서울시 3개권역 7개 복합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건이다. 사전예고는 공모계획과 주요 계획 지침에 대한 내용이 제시됐으며, 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해 건축사사무소의 응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1권역은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추정 설계비 29억9,000만

원), 서울 방학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0억5,000만 원)이다. 2권역은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1BL 설계공모(66억6,000만 원)를 비롯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2BL(27억4,000만 원)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0억5,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3권역은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4억

6,000만 원)과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공모(30억

7,000만 원) 건이다. 이들 설계공모에 대한 응모신청은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작품접수는 3월 17일 이뤄진다. 권역별 심사는 1권역이 3월 22일, 2권역은 3월 23일, 3권역은 3월 24일 예정돼 있다.

박관희 기자

▶ 사업개요						자료=LH
구분	사업면적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신길2	60,694㎡	45,430㎡	제3종일반주거	50%	300%	45층
방학역	8,429㎡	7,162㎡	준주거	70%	600%	39층
증산4 1-1BL	167,343㎡	102,423㎡	제1종일반주거	1종 : 70%	1종 : 240%	40층
증산4 1-2BL		29,639㎡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3종 : 50%	3종 : 300%	45층
연신내역	8,186㎡	6,676㎡	준주거	70%	650%	49층
쌍문역 동측	15,831㎡	12,902㎡	준주거	70%	500%	39층
쌍문역 서측	41,186㎡	33,835㎡	준주거	70%	450%	45층

건축 질의회신 Talk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의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물관리법 제2조	-	21.08.06

질의 요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한편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무허가 등) 및 가설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신고대상 관련 건축물 층수 산정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14조	-	21.07.02

질의 요지
기존 2층 건축물을 1개층 수직 증축하여 3층이 될 경우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인 3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의 의미는 기존 건축물에 증축하고자 하는 층수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 배치현황 제출 의무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25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22.12.28

질의 요지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인바,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사가 완료된 후 배치현황을 제출하여야 이 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됨.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1.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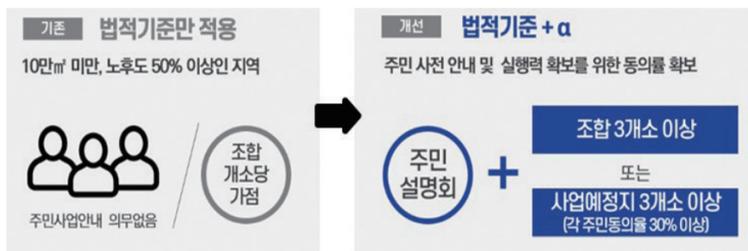
질의 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의 단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당 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 내 모든 건축물(여러 동)의 전체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대지 내의 모든 건축물에 있는 상기 가목에서 정하는 각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됨.

서울시 업그레이드 ‘모아주택2.0’ 추진계획 공개...앞으로 ‘주민설명회+주민동의율 30% 이상’ 있어야 모아주택타운 공모 가능

주민제안 요건 완화,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 先 지정



- 모아타운 신청요건**
- ① 동의요건 : 조합설립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각 주민동의 30% 이상)
 - ② 면적요건 : 5만㎡ 이상(사업시행면적 3만㎡ 이상)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업그레이드판인 ‘모아주택2.0’을 내놓고 지원방안을 보강,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모아주택이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2~4년)으로 추진해 재개발·재건축(8~10년)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모아주택2.0 추진계획을 보면 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토록 하고, 공모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우려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공모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포함되면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제곱미터 이상, 사업예정지 면적합계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행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앞으로 개선된 공모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신청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주민제안 요건도 완화(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수 2개소 이상→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하고, 관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 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해 사업면적 등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통합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영호 기자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상담문의: (02)461-3000 www.FFR.co.kr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동원/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Feature Flooring

자재 & 테크 프리즘

엠케이세라믹, 내구성·세련미 갖춘 롱브릭 벽돌로 시장 확대 '원년'

천연색 활용해 친환경, 내구성 강해 반영구적...각종 특허 및 인증으로 기술력 검증



엠케이세라믹의 롱브릭 제품

건물의 주재료가 벽돌인 시절이 있었다. 기존 목조중심의 국내건축 문화에 서양식 건축기법이 소개되며 벽

돌건물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현재 벽돌은 롱브릭 시대를 맞고 있다. 표준사이즈에 비해 고급스럽고 세련돼,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고궁이나 문화재에서 사용되어온 전벽돌을 자동화해 대량생산을 이끈 엠케이세라믹이 자연친화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롱브릭을 선보이고 있다.

엠케이세라믹의 롱브릭은 안료로 색상을 내는 시멘트 벽돌과 달리 흙을 소성해 나오는 천연색을 활용, 겉면과 내면이 동일한 색상을 지닌다. 100% 불연성 자재로 유독가스를 배

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1200°C에서 2차 소성해 ▲단열 ▲흡음 ▲흡취 ▲향균효과와 더불어 ▲내마모성 ▲내식 ▲내후성 ▲내구성도 강하다.

엠케이세라믹 관계자는 "엠케이의 롱브릭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돼, 영롱(공간) 쌓기, 내어(돌출) 쌓기, 비켜(기울여) 쌓기가 가능하다"며 "올해는 국내 최고의 전벽돌 생산업체에서 특허와 인증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롱브릭, 점보, 점도벽돌 등 주력제품들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건축사 등 전문가가 주택상태 진단부터 공사서류 검토까지 서비스

사용승인 후 10년 넘은 저층주택 대상, 2월 6일부터 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 중인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새 단장하고, 2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사공기기술사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이 서비스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상태와 개선

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서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지난 1월 27일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촉 전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교육도 마쳤으며, 내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해당된다. 아파트와 위반·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박관희 기자

원스톱 컨설팅 '알아봅시다'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있는가? III

건축사, 변호사, 의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등 여러 전문직에 관하여 이들이 상인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명확한 판례¹⁾가 있는 예는 변호사, 의사 정도라는 점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는 건축사에 관하여는 여러 다른 변호사님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보태어 본 결과, 앞선 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보다 우세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렇게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다고 볼 경우, 어떤 법률적 효과가 벌어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나 의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 또한 각 문제 되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상인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시한 것인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상법에서 말하는 상호를 등록할 수 있는가(상인이거나 상호 등록이 가능합니

다)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에 의해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고,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 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 민사 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의사는 상인이 될 수 없으므로 민사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의사는 상인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이처럼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또한 중국적으로는 어느 법률 쟁점(예, 상호 등록 가능 여부, 건축사님의 퇴직금 채권의 시효 등)이 문제되어 소송이 벌어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건축사의 상인성에 관한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직은 건축사가 상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몇몇 예상되는

쟁점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고, 이는 건축사님들이 법적 행위를 하실 때 유념하면서 행동하셔야 하는 대목, 즉 저의 견해를 따를 경우 상인임을 전제로 행동하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건축사님 또는 건축사사무소 법인

건축사가 상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 달라

해당 여부에 관한 명확한 판례 없지만

"건축사는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

건축사가 상인임을 전제로 할 때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설계비 채권 시효는 '3년'

건축사 업무 관련 채권 갖고 있다면

5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 행사하는 게 안전

(주식회사)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설계비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가 따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건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 지원...개별 휴게시설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 1억원까지

20인·50인 미만 사업장, 7대 취약 직종 근무 사업장 대상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구입도 가능

▶ 차등지원 비율 및 대상	
지원 비율	대상 사업장
70% (자부담 30%)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7개 * 취약직종이 근무하는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텔레마케터, ③돌봄 서비스 종사원,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건물경비원, ⑦아파트경비원 ○ 고열한랭다습작업,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는 사업장 ○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장
50% (자부담 50%)	○ 상기 조건 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 ○ 냉난방기, 소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비를 2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른 결과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이나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7개 취약 직종 근무 사업장

의 경우 최대 7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으로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하우스, 조립식 휴게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1) 법률로서 각 전문직의 상인성에 대해 규정하면 다름이 없었지만, 각 전문직의 상인성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기에 판례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봉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인터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의무가입 반듯하게 완성...척박한 일터 바꾸고, 건축사

Q 의무가입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법 개정 후 지난 1년간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의무가입은 제 임기에 처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공감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의무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회장 취임 후 의무가입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과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나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한 여러 현안과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의무가입 추진의 중요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고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진정한 실패는 의무가입이라는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의무가입의 궁극적 목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 즉 건축사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Q 의무가입이 지난해 2월 3일 공포되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 지난 1년간 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법 개정 후 조금씩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법 개정을 이뤄낸 회원과 협회의 역량과 의지에 대해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호의적인 시각 변화가 시작되고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도 우리의 의견과 주장이 명분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왜곡된 시선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에 대한 대통령 축사가 변화된 모습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7,000여 명 이상이 모인 행사는 우리 건축사대회가 처음일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11월, AI 플랫폼의 전문가 집단 업역 침해에 대해 우리 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 대처를 한 것도 의무가입 후 변화된 모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이 1월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의무가입 이후 협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두 단체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국민과 사회 속에 반듯하게 자리 잡아 두 단체 못지않은 국민 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8월 4일부터 의무가입이 시행된 후 그간의 경과와 2023년부터 협회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시행일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신규 사무소 개설자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그리고 기존 사무소 개설자는 올해 8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89%가 가입했지만 기존 개설자는 전체 대상자 3,814명 중 13%에 불과한 470명(23년 1월 30일 기준)이 가입해 예상보다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생각도 있고, 아직 협회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점도 있고, 의무가입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도 다소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집행부는 이 점을 명심해서 올해는 미 가입자들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규 가입한 회원들도 협회 내에 잘 정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에서 비가입 회원들과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시도건축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3,000여 명의 미가입 건축사들이 100% 빠짐없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무가입 1단계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협회의 구체적인 변화점은 우선 이사회의 구성입니다. 의무가입 전제조건으로 이사 인원의 30% 이상을 국토부 등 타 건축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협회는 변화된 위상에 걸맞게 보다 폭넓고 대범하게 건축계를 선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은 명분과 논리 우선하고 중요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치열함·집요함 더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성과 만들 수 있어

Q 의무가입 추진 후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그간 여러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월 3일이면 의무가입이 공포된 지 어느덧 1년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쩌면 식상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한 번쯤은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며 의무가입 추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와 비전,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은 한마디로 장벽을 넘으면 더 높은 장벽이, 반대를 극복하면 또 다른 반대가 앞을 가로막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외부

의 반대는 처음부터 예상했으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부의 이견과 반대도 큰 걸림돌이었으며, 추진하는 집행부에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와 장벽은 의무가입을 저지하여 무산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의무가입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더욱 각오와 결의를 다졌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가입이 완료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말씀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원 모두의 하나 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법 개정에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명분과 논리가 우선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명분과 논리가 분명해도 그 반대의 명분과 논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함과 집요함을 더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만이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어떤 일도 해결하고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의무가입을 이룬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Q 올해 2023년 협회의 중점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첫째, 법제도 부문에서는 ‘민간 설계대가 제정 건축사법 개정’입니다.

의무가입의 국가적 명분은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감 부족으로 아침이면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이면 또 내일을 걱정해야 하

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계대가는 끝없이 추락하여 황폐해진 일터는 무한경쟁에 내몰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보다 못한 설계 대가에 두 세배 늘어난 업무로 인한 피폐된 우리의 터전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건축사에게 공인으로서의 소명도 국가건축정책동반자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대가는 지난 2년간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건축사의 이해의 문제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에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좀 과장하면 의무가입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임기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가 이어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민간대가 법개정이 완료되면 의무가입의 2단계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허가·심의제도 개선 역시 의무가입 바탕 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기까지 많게는 40여 개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가가 건축사에게 자격을 부여할 때는 건축의 모든 과정에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지나친 규제와 창작의욕 저하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또 다른 최우선 과제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좋은 설계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데, 국내는 허가를 받기까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심의·인증절차가 너무 많아 창작 의욕마저 꺾이는 현실입니다.

둘째, 협회 내부적으로는 조직과 기능개편을 통해 회원 업무 지원에 최적화, 집중화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히 없애고 오로지 회원의 업무편의와 위상 강화, 업역 확대라는 협회 본연의 역할에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건축사보 문제, 설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각종 계약과 소송 지원, 전문 서적 출판 등 이제 구체적으로 회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협회를 통하면 무엇이든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와 협회 운영의 체질 개선입니다. 의무가입의 취지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건축계 전체의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다운 샴 실현에 '전 회원 한뜻'으로 매진해 새 시대 열 것'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개발하여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무가입이 개정 공포된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행사가 돼야 할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계 대통합,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
공공의 역할 다하고,
K-건축 구현 위해 함께 나서야**

Q 향후 궁극적으로 협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건축계가 추구해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건축사대회에서 3가지의 향후 협회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협회가 건축계를 선도하여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건축계 대통합입니다. 그동안 다양성이란 명분과 단체 간 이해의 충돌로 지속된 건축계의 분열은 주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건축계는 사회로부터 소외돼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 약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건축계의 통합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삶,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무리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은 아니나 단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금부터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건축사가 국가건축정책 동반자로서 공공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많은 부분이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건축에 관련되어 있고 지자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건축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확대돼야 합니다. 그간 미흡했던 건축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 건축사는 적극적으로 사회 현상을 살피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사회적 이슈에 끊임없이 해법을 제시, 공공의 역할을 충실할 때 우리 건축사는 국가건축정책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

럽게 건축사의 위상과 중요성은 강화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제가 의무가입 추진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은 또 하나의 수확입니다.

셋째는 K-건축 구현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건축계가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면 그렇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건축 문화의 제자리를 찾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보다 나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리고 유구한 선조들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한 예로 프리츠커 상만 보더라도 일본은 이미 여덟 차례나 수상하고 인도, 중국, 심지어 올해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라는 생소한 나라에서조차 받은 이 상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류와 건축환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건축사에게 주어진다 프리츠커 상의 이념을 생각해 보며 동시대 건축사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건축계에 공정하고 정당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작고 소외된 것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건축사가 사회 현상의 해결사로서의 대안을 만들어낼 때 프리츠커 상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축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선봉에 우리 건축사가 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위상은 새롭게 재조명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범 건축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건축계에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연임한 회장으로 협회 생활에서 그동안 느낀 점은 무엇인지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으며 소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 의무가입을 마무리할 수 있어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낍니다. 추진하기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의무가입 법 개정이 건축계, 정부, 국회의 다양한 관점과 논리를 앞세운 모든 반대를 하나씩 헤쳐 나가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안전이라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도 큰 도움이 되었고 건축계의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결기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 제가 두려웠던 것은 의무가입 법 개정을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보다 연임한 회장이 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 회원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좌절감이었습니다. 2017년 제가 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유도 우리 건축사의 잃어버린 자긍심과 자존감을 되찾아야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는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협회 사무처 조직이 의무가입 시대에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마무리 못한 사안을 차기 집행부가 이어서 흔들림 없이 진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무가입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성과에 자만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되기에 의무가입 취지·목적은 잊지 않고 오늘에 새로이 되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이사진과 힘을 합쳐 착박한 일터와 생태계, 건축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 신발 끈을 동여매겠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 협회 내에서 다소 갈등 예상 이를 협회와 건축계 발전 성장 토대로 만들어야 이해하고 폭넓게 포용하며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건축 비전과 꿈 만들어가는 협회 돼야

Q 앞으로 우리 협회가 가야할 길은?

국가나 사회 그리고 조직이나 단체가 한 단계 상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갈등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집단은 궁극적으로 쇠퇴하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 갈등 없이 열매만 따먹고 살았던 하와이나 남태평양의 원주민은 결국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의무가입으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협회 내에서 다소 갈등이 있을 수 있더라도 예상되나 이런 갈등을 협회와 건축계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제 건축계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건축계를 리드하고 대한민국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자문하는 유일한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서 이해하고 보다 폭넓게 포용하며 보다 멀리 바라보면서 건축의 비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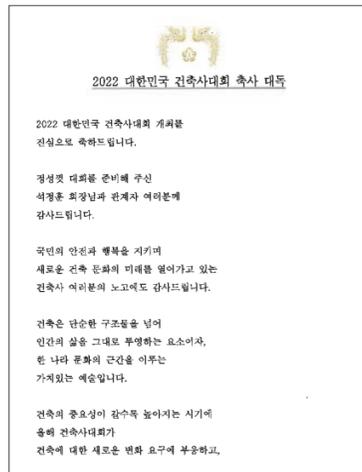
꿈을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새로운 '건축사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갈 시대적 사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입으로
자긍심 회복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가지게 돼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원이 이룩한 성과
반드시 회원 앞에
오랜 현안 깔끔히 해결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기반
만들어낼 것**

Q 마지막 회원분들에게 부탁 또는 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보다 우선 회원 여러분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윤석열 대통령 축하

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저와 집행부에 무한한 지지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의무가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의무가입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원이 이룩한 성과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기까지 시간은 필요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반드시 회원 앞에 우리의 오랜 현안을 깔끔히 해결하고 건축사로서 당당히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담 홍성용 편집국장
정리 장영호 기자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05명 중 찬성 188명, 반대 0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9월 1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참가한 건축사들이 건축사 대화함을 기원하는 '불빛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이 지난해 10월 17일 진행됐다. 석정훈 본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상 그 후 ⑮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우수상 ‘소슴당인’

서울지하철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 주거지역에 솟은 새 명소
임승모 건축사 “법적 제한 받아들여 특징적 볼륨 만들려 노력”
윤명진 건축주 “멋진 건축사, 시공사 만나 잊지 못할 경험”

국내 건축 문화를 이끌 다채로운 건축물들을 선정했던 한국건축문화대상, 해마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열다섯 번째 작품은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대상 수상작 ‘소슴당인’이다.



소슴당인 사진=신경섭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겼다. 건축주 윤명진 씨는 “1~2층에 상업시설, 그리고 3~4층에 주거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짓고 싶었어요. 원래 인연이 있던 임승모 건축사에게 설계를 부탁했다”라면서 “건축사와 시공사까지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서로 챙겨 주며 세운 건축물이다. 임 건축사가 많이 고생했는데 한국건축문화대상 등 많은 상을 타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이 적용된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물의 최대 볼륨과 최외곽선을 어디까지 그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설계자 임승모 건축사는 이곳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 한계 속에서 특징적인 볼륨을 찾아갔다. 정북방향 사선제한 면과 건물의 입면은 평행면을 유지한다. 이렇게 뻗어나간 사면과 수직의 벽과 만나는 지점까지 방향성을 유지하고 끊기는 곳 없이 연장하여 솟아있는 볼륨과 뾰족한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했다.

부지가 공(空)터이긴 하지만 터와 맞닿아 사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 고추도 말리고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는 등 여러 용도로 이용했다. 나름의 다목적 공간으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변 거주자 중인 ‘소슴당인’ 건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 의견 조율과정에서 갈등도 없지 않았다. 임 건축사와 건축주 윤 씨는 인터뷰 중 그 당시를 떠올리며 “그래도 계획했던 건축물이 실물로 지어져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웃었다.

소슴당인이라는 이름은 ‘소슴’과 ‘당인’의 합성어다. ‘소슴’은 솟아오른 지붕의 모양(솟음)과 이 지역의 옛 이름 ‘당인(리)’에서 따왔다. 인터뷰를 마치며 건축사와 건축주는 “과정

멀리서 보면 마치 세모와 네모가 어우러진 기법의 로고를 보는 것 같다. 주변 풍경과 함께 보면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짓느라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끄덕임으로 바뀐다.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 우수상 수상작 ‘소슴당인’(설계자 임승모 건축사,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이다.

소슴당인은 서울지하철 6호선 합정역과 상수역 사이 좁은 골목길 중간에 위치한다. 주변은 빨간 벽돌을 주재료로 하는 저층 주거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폭 5.6미터, 깊이 17미터의 좁고 긴 이형(異形) 부지로 3미터 도로에 접해 있다. 전면은 좁고 뒷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넓다. 전면은 남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면은 다른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넓게 보면 건축물 전면에는 현재 지하화가 완성된 당인리 발전소가 위치하고, 4층 높이로 올라서면 담 너머로 일부 노출된 지상 구조물과 한강이 보인다.

이곳에 상업시설과 주거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싶었던 윤명진 건축주는 안면이 있던 임승모

임승모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임승모 건축사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려움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계획안을 보여 드렸을 때 계획안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수용해 주셔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다만 전면도로가 협소해 접근이 어렵고, 인접대지의 건축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서 설계 단계부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Q. 건축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Form Follows Possibility’ 즉, ‘형태는 가능성을 따른다’는 SML의 모토이자 모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슴당인에서도 프로

젝트의 여러 제약사항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가능성을 담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했던 것이 각각의 요소마다 반영되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거지역에 위치하는 소슴당인은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적극 받아들여 특징적인 볼륨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정북방향 사선제한 면과 건물의 입면은 평행면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뻗어나간 사면과 수직의 벽과 만나는 지점까지 방향성을 유지하고 끊김 없이 연장하여 솟아있는 볼륨과 뾰족한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Q. 이번 2022 건축문화대상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소슴당인(SOSEUM)은 2022년

Architizer A+Awards Popular(미국) Choice Winner와 ICONIC AWARDS ARCHITECTURE(독일)에서 WINNER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부문에서의 수상은 건축환경과 대지의 조건, 법적 제한 등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축한 소슴당인의 의도와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이끌고 있는 SML의 이름이 소, 중, 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즐깁니다. 2023년에도 이전보다 흥미로운 작업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명진 건축주와의 일문일답



윤명진 건축주

Q. 처음 ‘소슴당인’ 건축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업 건축물 시공에 일가견이 있는 지인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을 듣고 생각해 보니 1층에 상업시설이 있고 위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Q. 임승모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기신 이유, 그리고 건축 당시 특별히 주문하신 내용이 있나요.

임승모 건축사님과 원래 안면이 있던 사이였어요. 워낙 실력이 있는 건축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설계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제안해 주신 지인과 임 건축사님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요. 그래서 제안부터 설계, 시공까지 우리 사이에서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갈등은커녕 서로 자기 몫을 조금씩 양보하며 건축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요.

Q. 건물이 지어진 뒤, 건축주 측에서 원하신 대로 건축물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요.

예. 현재는 상업시설이 층층마다 들어서 있습니다. 1층에는 고급 로드바이크샵, 2층에는 그래픽디자인 스튜디오, 3~4층은 영유아한복디자인샵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위층에 제가 직접 거주하려고 했는데 건축비용 때문에 아직 거주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Q. 그리고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것을 고민하는 건축주들에게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지금의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로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한 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이미 주변에 거주하시던 분들과의 소통과 조율 그리고 관련 행정 당국과의 허가 절차 논의 등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상 못 했던 점이라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생각이 있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힘을 모은 건축사와 시공사를 너무 잘 만나서 좋은 경험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 좋은 파트너를 만나 결실을 맺을 수 있었

다”며 서로를 추켜올렸다. 다음은 임승모 건축사 그리고 건축

주 윤명진 선생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서울시, 한옥 지붕 점검에 드론 도입

전국 최초로 드론 활용한 한옥 관리 시작

다각도 정밀 촬영으로 효과적인 점검 가능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한옥 지붕 점검에 드론 촬영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 상태를 육안으

로 확인한 뒤 일일이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드론 촬영 도입으로 지붕 전체 모습, 기와 세부 상태 등을 다각도로 정밀 촬영이 가능해 보다 효과적

인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누수 발생 시 지붕 위에서 면밀한 조사가 가능해 정확한 문제점 파악과 수선 방법의 도출도 용이해진다.

드론 촬영은 ‘한옥 출동 119’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된다. 한옥 출동 119는 생활밀착형 한옥 점검과 관리를 위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의 지원

책이다. 한옥은 유지 관리와 수리 정비가 적고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문제발생 시 대응이 힘들다는 거주자의 불편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옥 지붕 드론 촬영은 지붕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 해 제공된다. 관계 기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최소 4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을 비롯한 한옥 출동 119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를 방문하거나 전화(766-4119),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등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급성장하는 CM시장, 대형 건축사사무소 CM부문 분리 나서며 시장 선점 '올인'

최근 정립건축도 CM 분리,

민간 CM 시장 확대가 시장 성장세 이끌어

▶ 2021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 능력 평가 공시(단위 : 백만 원)

순번	업체명	금액	2020년 금액
1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18,474	73,215
2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100,078	101,151
3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63,764	75,722
4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60,430	51,415
5	(주)디앤오씨엠	48,997	29,504
6	(주)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44,886	27,381
7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40,301	35,060
8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0,073	45,112
9	(주)토탉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8,150	27,859
10	(주)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37,373	22,601

건설사업관리(CM) 시장 성장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CM은 건설사업관 상승곡선을 그리는 건축사사무소들도 CM부문 분리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정립건축)가 최근 CM부문을 분리했다. 정립건축은 (주)정립씨엠건축사사무소라는 별도 법인으로 CM부문을 법적 분할하고, 초대 대표에 기존 정립건축에서 CM부문을 담당했던 방명세 대표이사(사)가 취임했다.

정립건축은 정립씨엠건축사사무소 신설 전부터 CM시장에서 확고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분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2년 CM 능력평가 공시'(한국CM협회)에 따르면 용역형 CM으로 한 해 동안 448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CM 능력평가 공시는 전년도 CM 실적과 재무상태 등 해당 업체의 CM능력에 관한 정보를

매년 8월말까지 평가·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정립건축은 2019년 247억 원, 2020년 273억 원 등 매년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2021년에는 400억 원을 돌파했다.

정립건축 외에도 설계와 CM부문을 분리한 사례는 다수 있다. 우선 2022년 CM 능력평가 공시 기준 2위에 올라있는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분리한 경우다. 같은 공시 기준 3위에 있는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도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건원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과의 분리를 통해 CM서비스·시장 확대를 이끌어 낸 사례다.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경우 2020년 이후 CM 능력평가 공시에서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은 2019년 이후 꾸준히 6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CM 업계 관계자는 "CM실적이 2020년 7,982억 원 수준에서 2021년 9,025억 원으로 급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는 점, 특히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규모가 있는 건축사사무소들이 앞다퉀 CM분리에 나서는 점도 서비스고도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시장 선점, 수주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해체공사장 관리감독 강화...건축사 등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현장확인 필수

공사 전 공사량 등 표기된 내역서 제출해야

해체계획서 관련 법령

-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작성 기준, 해체심의 등)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제5항(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 ▶ 해체 허가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작성
 - ▶ 해체 신고대상 :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1월 20일 해체공사장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25개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을 진행,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미온적 행정 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건축사 등 전문가가 계획서 작성·검토 시 현장 확인을 필수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

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 시 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 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 공사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 및 조치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

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 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 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전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 '중대해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MY 부동산 뉴스 | 격주간의 엄선된 부동산뉴스를 콕 집어 전달합니다

공공 분양 주택 뉴:홈 2월 사전 청약

LH는 6일부터, SH는 13일부터 누리집 신청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 고덕강일 3단지

나눔형 첫 시행...1~3% 대 금리, 최장 40년 대출 가능

시행사	공급지역	공고	접수(나눔형+일반분양형)		발표
			특별공급	일반공급	
LH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	'22.12.30	'23.2.6~2.10	'23.2.13~2.17	'23.3.30
SH	서울 고덕강일3단지	'22.12.30	'23.2.27~2.28	(우선) '23.3.2~3.3 (잔여) '23.3.6	'23.3.23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작됐다.

뉴:홈은 지난해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정책 브랜드로, 향후 5년간 나눔형 24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공급된다.

이번 사전 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이 포함된 나눔형(이익공유형) 도입 이후 첫 시행이다. 이번 청약의 나눔형은 고양 창릉 877호, 양정 역세권 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호이다. 남양주 진접2 372호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 시세 차의 70%를 가질 수 있다. 나눔형 중 80%가 특별공급이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 최초(25%)로 구분된다.

나눔형 특별 공급에 신설된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 만 19세에서 39세의 미혼이라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뉴:홈은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소득, 시장금리 등 여건에 따라 1~3%대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나눔형과 선택형은 한도 5억 원, 일반형은 한도 4억 원 내외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의 당첨자 발표는 3월 중이다.

조아라 기자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최대 두 배로 확대

서울시, 개정조례 입법예고...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후속 조치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정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⑦ (생략) <신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로 한다. ④~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서울시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두 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물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이 확보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하는 강제 집행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2회로 명시했다. 현행은 "구 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관희 기자

국토부, 12월 주택 통계 발표...주택 인허가 전년비 4.3%, 착공실적은 34.3% 감소

미분양 '위험선' 넘어 6만8000가구, 한 달 새 17% 급증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

지난 1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 준공실적은 4.1%, 착공실적은 34.3%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22년 12월 주택건설실적 등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한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만1,791가구로 전년 동기(54만5,412가구)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은 19만833가구로 34.5% 감소, 지방은 33만95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3%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42만7,660가구로 10% 증가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141가구로 같은 기간 대비 22.9% 감소했다.

착공실적은 인허가실적보다 크게 감소했다. 12월 누계 착공실적은 전국 38만3,404가구로 전년 동기(583,737가구) 대비 34.3%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37.9%, 지방에서 30.5% 줄었

며, 아파트는 29만9,022가구로 36.7%, 아파트 외 주택은 8만4,382가구로 24.0% 줄었다.

준공실적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1만3,798가구로 4.1% 줄었다. 수도권이 22만8,91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하면서 실적을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돼 전월(5만8,027가구) 대비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한 달 새 1만 가구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가구를 뛰어넘는 것으로 2013년 8월(6만8,119가구)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미분양이 집중된 곳은 지방이다. 수도권이 6.4% 증가했다면 지방은 전월(4만7,657가구) 대비 19.8%(9,418가구) 증가했다.

박관희 기자

소방관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건축물방화구조규칙’ 오는 6월 개정돼 5밀리미터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3중유리’도 사용 가능

현재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유리창 파손이 쉽게 되도록 두께가 제한되고, 삼중유리를 사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오는 6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이 개정돼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된

다. 또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안전난간과 소방관 진입창 높이가 난간의 높이기준으로 통일된다.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을 건축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영호 기자

▶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과제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선	조치사항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 완화	소방관 유리창의 경우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고, 이중 유리 경우에도 두께기준이 있어 단열성능 확보가 어려움 -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 삼중 유리사용 불가	소방관의 진입과 무관한 공기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5밀리미터 이하인 강화유리인 경우 삼중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복층 유리의 경우 전체 유리창의 두께 기준이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일부 유리의 경우 삼중 유리 허용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3.6)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건축법령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이 경우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80cm 이내)과의 상충으로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노대 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3.3)
아파트 배타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아파트 배타 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경우 피난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규모로 설치해야 하나, 비상시에만 쓰이는 시설이라 충분하지 않은 규모로 설치되거나, 인접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계벽 등의 저비용 시설 위주로 설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보다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배타면적 산입 제외. 단, 대피 공간 등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23.4)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규정	발코니 외 인접한 곳에도 설치 허용	「건축법 시행령」 개정(23.4)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기준 완화	근린공원 내 도서관·문화예술회관·운동시설 등 '특정공원시설'은 실제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원 내 운동시설 확대 설치 어려움	공기확보를 통한 휴게공간의 제공이라는 근린공원의 목적과 운동시설 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특정공원시설에서 제외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23.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요청 기한 명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도시군계획도로, 5만 제곱미터 이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공원 등)는 국토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도 지사가 시군구에서 협의 요청을 받은 이후 시도지사가 국토부에 협의요청을 해야 하는 기한은 규정이 없음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시도 지사가 사전 검토 후 30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 국토부에 협의 요청하도록 명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규정」 개정(23.2)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협의 양도인에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어 있으나 동일 사업지구임에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외에서는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 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22.12.29)

소토 무라 특별전, 2월 말까지 서울시건축전시관에서

2011년 프리츠커상 포르투갈의 모더니즘 건축사

스케치, 도면, 모형 등 전시, 무료 관람 가능

포르투갈의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소토 무라 에두아르도(Eduardo Souto De Moura)'의 전시회가 오는 2월 28일까지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다.

소토 무라는 현대적 조형 언어와 재료뿐 아니라 고향인 포르투의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왔다. 시대 흐름에 영향 받지 않는 보편성과 미학으로 그는 2011년 프리츠

커상을 수상했다. 이번 전시는 <건축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소토 무라의 초기작인 '브라가 시장'을 비롯해 '브라가 경기장', '불고 타워', '파라울 헤고 박물관' 등 건축물의 드로잉과 도면, 모형 등을 볼 수 있다. 전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시건축전시관 비움 홀에서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조아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국토부, 주차편의성 제고 위한 주차공간 성능등급 도입
기본형 건축비 1~4% 범위 내 가산 허용



공동주택에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주차공간 성능등급이 도입된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 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편의성 등 정보를 충분히 알고, 아파트를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주차공간 법정기준은 주차면 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2.6미터×5.2미터) 30% 이상이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는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차공간 가산비용은 기본형 건축비의 1~4%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박관희 기자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02)3416-6962~6 news@kira.or.kr



3,000 건축사 사용중!
허가권자지정, 상주, 해체, 석면 올인원!!

지역건축사회 특별특별 할인 친절상담 02 3462 1336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드립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22 사랑의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사회 공헌사
업의 일환으로 '2022 송년의 밤행사'
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부한 성금과
협회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
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025참전유공자회'에 후원금을 전달
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TBS 교통방송에 라디오 광고 송출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서울시와 수
도권 일부를 청취권으로 하는 TBS교
통방송에 서울시건축사회와 건축사
를 알리는 홍보 광고를 송출한다. 집
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는 건축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캠페인
성 이 광고는 '건축사는 국가공인 건
축 전문가'라는 정확한 인식과 의미
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
출되는 시각은 낮 두시 반 즈음이며
시사 프로그램 방송 중 송출된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혜란 건축사, 한국VE연구원 FAST연구회장 선임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혜란 건축사
(예일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1월 9일
개최된 한국VE연구원 FAST연구회
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2006년 설립된 한국VE연구원은 우리
나라 건설VE 지속적인 연구와 VE전
문교육을 통해 900여 명의VE전문가
(CVP)를 배출하고 있다. 김혜란 건축
사는 2021년 9월 개최된 VE컨퍼런스
에서 '사용자 만족을 위한 공간구성
의 기능중속 적용방안 연구법'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국토교통부장
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2년 6월 미
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된 'SAV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논문
을 발표해, 국내 VE 전문가들의 위
상을 높인 바 있다.

영남권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영남권건축사회(부산·대구·울산·경
북·경남)가 1월 17일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간
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작년 추
진사업 점검 및 평가, 2023년 건설안
전 업무 추진방향 및 사업범위를 논
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규
모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기술지원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안전 홍보 및 교육 방안 등이
다뤄졌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 학생 건축 페스티벌' 개최



부산광역시
건축사회는 2
월 10일부터
14일까지 유라
시아 플랫폼
B동 109호에
서 부산 학생
건축 페스티
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전시 및
포럼 구성으로 진행되며, 부산 소재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공간 커뮤
니티의 장을 통한 부산 건축문화 창달
및 우수 인재 발굴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사회
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 중 하나인 만
큼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
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연탄 나눔으로 이웃에 따뜻한 손길 전해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계묘년 새해
를 맞아 연탄 나눔으로 이웃에 따뜻
한 손길을 전했다. 나눔은 1월 10일
부산시 동구 좌천동 일원에서 진행됐
다. 이날 부산시건축사회 최진태 회
장을 비롯해 소속 건축사 회원과 가
족 등 35명이 모여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의 가정에 약 1,2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또한 500만원의 기부
금도 함께 전달했다. 기부금 중 약
400만원은 연탄 구매에, 나머지는 쌀
기부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진태 부
산시건축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
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참여해주신
건축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수영구협의회 수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수영구협의회
가 수영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수영구협의회 회장단
은 지난해 12월 26일 수영구청 구청
장실에서 곽외열 수영구청 복지환경
국장과 함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남승복 협의회 총무는 "성금이 뜻깊
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소감
을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취
약계층을 위한 '수영구 희망다리농기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수영구
협의회는 10년 넘게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온 바 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다우데이터와 'BIM 컨설팅 업무 제휴' 위한 MOU 체결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5일 대
구광역시건축사회 창조홀 대회의실



에서 ㈜다우데이터와 BIM 컨설팅
업무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참가자
들은 BIM 숙련도에 따른 초급A, 초
급B, 중급 총 3개 반으로 나누어 ㈜
다우데이터로부터 BIM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학습지원을 받게 된다. 석
한수 대구시건축사회장은 "국토교통
부는 BIM을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핵심기술로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인천 중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4일 사
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인천
시 중구청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
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장섭 인
천시건축사회장은 "인천건축사회가
터 잡고 있는 중구의 취약계층을 위
한 지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
어서 기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중구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접수 후 중구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17일 국
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와 건설안전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건축
사회 간담회 등으로 협력체계를 강화
하고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필요한 기
술교류도 활발히 진행키로 했다.
김원호 울산광역시건축사회장은
"국토안전관리원과의 소통과 정보공
유 등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
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신년회 및 설립 8주년 기념식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1월 6일
세종필드 CC라운지 레스토랑에서
'신년회 및 설립 8주년 기념식'을 개

최했다. 기념식에는 세종시건축사회
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외 관계 공무
원, 자문단, 협력사 등 70여 명이 참
석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장 표창
시상과 신년사(김승태 세종시건축사
회장), 축사(최민호 세종시장), 축전
(강준현 국회의원_세종/을), 신입회
원·자문단·협력사 소개, 만찬공연 순
으로 진행됐다. 김승태 세종시건축사
회장은 "2023년 세종시건축사회의 발
전과 도약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철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경기도건축사회는 1월 9일 경기도
청 도지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와 김철민 국회의원과 만나 건축 관
련 제도 및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내수 경기도건
축사회장, 최형순 부회장, 조영수 부
회장, 이민자 기획위원장이 참석했으
며, ▲건축 인허가 행정 통계조사 실
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평가
제도 도입 ▲건축사사무소 실태 점검
민관 합동 조사 기구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
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더불어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협
력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책
제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하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의 활동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경기도 안전특별
점검단과의 연계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건축사회, 2023년 시무식 개최



강원도건축사회는 지난 1월 17일
강원도 건축사회관에서 임직원 및 회
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은 2023년도
주요역점 사업에 대해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는 회원들이
새해 바라는 점에 대해 경청하는 시
간을 가졌다.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원 4인, 충북교육감 감사장 수상



충청북도건축사회 지광제(지공 건
축사사무소), 이정미(토림 건축사사무
소), 양수원(이가 건축사사무소), 서명
준(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는 충청

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교육
시설발전 유공자'로 선정됐다. 유공
자로 선정된 이들은 2022년 12월 29
일 충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
감 감사장을 수상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전북예총하림예술상 공로상 수상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장이 지
난 12월 2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
제회의장에서 전북예총하림예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예총 전북연
합회와 하림그룹이 공동으로 수여하
는 이 상은 매년 예술문화발전에 기
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는 상
으로, 10개 협회와 13개 시군예총에
서 추천을 받아 장르별로 한 명씩을
선정 시상한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장(유.장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은 전주시 건축심의위원, 원광대 외
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2022년 건축 부문 본상 수상자로 공
로상을 받게 됐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23년 시무식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지난 1월 3일
집행부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새해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오공환 경남건축사회장은 "작년 집
행부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며 "올해도 한결같은 열정과 진정성
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경남건축사회
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올해 첫 일정으로 1월 7일
경남건축사회 추구동호회와 등산동
호회에서 개최한 시축제·시산제 행사
에 참석해, 건강하고 완성한 동호회
활동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등 회원단
합과 화합을 기원했다.

진천지역건축사회, 진천군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충청북도건축사회 진천지역건축사
회는 2022년 12월 29일 진천군장학회
를 방문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
했다. 김준봉 진천지역건축사회장과
임원들이 함께한 이날 전달식에서 김
준봉 회장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
성을 위한 장학금 마련·기탁식에 함
계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김남국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march@donga.com



불황 이후 찾아올 호황에 대비한 '머슬업 전략'



불황기, 성장 잠재력이 높거나 강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베이

호황기에는 많은 기업이 성장에 집중한다. 호황기에 유용한 대표적인 전략적 접근이 바로 '블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이다. 이는 '전격적(blitzkrieg)'과 '규모 확대(scaling)'를 결합한 조어로 마치 전쟁에서 전격전을 벌이듯이 미친 속도로 규모를 키워가는 전략이다.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해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쏟아부으며 투자를 확대했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새로운 경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불황기에 유용한 접근 중 하나가 바로 '머슬업(muscle-up)' 전략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기업 역시 불황기를 버틸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자

강력한 의지와 조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 회사는 수백 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과제당 절감액은 10억 원 안팎에 그친 경우가 많았지만 전체를 합산해보니 무려 1100억 원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재원을 바탕으로 신제품 마케팅을 강화해 회사의 체질을 개선했다.

근육을 키우겠다고 움츠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근육을 키우려면 특정 근육을 고립시키고 자극을 주는 방법을 활용하는데, 기업 역시 불황 이후 찾아올 호황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분야에 집중화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베이는 과감한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실탄으로 1조 원 이하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스몰딜에 집중했다. 또 이베이는 중고 스니커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니커콘을

인수한데 이어 NFT업체, 자동차 부품 거래 플랫폼 업체 등을 인수했다. 이름이 알려진 대형 기업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거나 강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전략을 통해 근육을 키워놓은 기업은 불황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황 이후 찾아올 호황기에도 경쟁 기업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과거 호황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확률이 다소 낮은 모험적 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이런 접근이 위험하다. 불황을 계기로 우리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근육 키우기에 나서야 할 때다.

불황기 버틸 수 있는
자금 확보 위해
비용절감 프로세스 개선
불황이후 찾아올 호황 대비한
체질 강화, 노력해야 할 때

본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과거 성장기에 사업 확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전선을 벌여놓은 기업이라면 비핵심 분야 자산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다. 실제 이베이는 한국의 G마켓 지분을 매각하는 등 과거 고성장기에 투자했던 다양한 회사의 지분을 팔아 총 20조원이 넘는 자금을 회수해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체질 개선을 위해 기존 관행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롯데칠성은 사내 핵심인재들을 발탁해 제로베이스 예산(ZBB·Zero-Based Budgeting) TF팀을 만들어 전사적으로 비용절감 및 프로세스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CEO의

지역답사수첩 |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리산 최고의 조망처, 금대암(金台庵)



금대암 무량수전

금대암(金台庵)의 유래

지리산 북쪽 산자락의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전북 남원시 산내면 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 산자락 길 입구에 세워진 '지리방장제일금대(智異方丈第一金臺)'라는 표지석을 만날 수 있다. 방장(方丈)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금대암이 지리산에서 으뜸가는 절집이라고 하는 뜻이다.

금대암의 창건 시기는 인근에 있는 안국사와 같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등구사의 내력을 기록한 '지리산 등구사사적'에는 행호라는 승려가 등구사를 창건한 이듬해인 67년(신라 태종 연간)에 안국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암응운 역시 '근거할 만한 사적은 없으나, 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고승 대덕이 머물렀던 곳'이라며, 금대암이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고찰이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을 '금대암기'에 전하고 있다.

금대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인 해인사(海印寺)의 말사이며, 금대사(金臺寺)라고도 한다. 금대암은 신라 도선국사가 참배지로 인정했으며, 서산대사가 수도 성취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오고 있다.

현대에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된 뒤 금대암 복구기성회가 조직되어 중건되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인법당(人法堂)과 산신각(山神閣) 등이 있으며, 중요문화재로는 1972년 경상남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금대사 삼층석탑이 있다. 이 삼층석탑은 행호가 절을 창건할 때 세운 것으로 전해지나, 탑의 조성 수법으로 보아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금대산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 하봉, 중봉, 천왕봉, 제석

봉, 연하봉의 풍경을 조망하기 최적의 장소이다. 금대산의 9부 능선에 자리한 금대암에서 바라본 지리산의 풍경을 '금대지리'라고 하며 지리산의 주 능선을 조망할 수 있다. 금대암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면 활처럼 뻗은 지리 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마천면에는 9개의 사찰이 있으나 1금대, 2벽송, 3상무주라 하여 금대암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불교에서 '금'은 부처님을 뜻하고, '대'는 앉은 자리를 뜻하니 금대암은 곧 부처님이 앉은 자리라는 뜻이다.

금대암의 전나무와 도마마을 다랭이는

금대암의 전나무는 지리산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산맥을 잇는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자리한 금대암 입구에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한 그루는 벼락을 맞아 없어졌다. 나무의 나이는 500여 년 정도로 추정되며, 큰 나무의 높이가 40미터, 둘레가 2.92미터로 우리나라 전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크다.

예로부터 금대암에서 보는 지리산의 풍경은 최고로 꼽혔다. 금대암 앞뜰에서 전나무 너머로 바라보는 지리산 주 능선은 서북방의 노고단으로 동남방의 천왕봉까지 활처럼 휘어지며 동북방을 꺼안은 듯한 모습이다.

탁영 김일손이 쓴 기행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행호조사(行乎祖師:1403년)가 다시 세운 금대암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많이 있었으며 현재의 전나무도 당시의 나무로 추측을 하고 있다.

금대암을 오르는 길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급경사의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올라가야 한다. 금대암 방향으로 조금만 오르면 도마마을의 다랭이는 촬영 표지판이 있다. 예전에는 CNN에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뽑힐 정도로 유명한 촬영지였으나 현재는 다랭이는 주변이 조금 축소되었고 논에서 밭으로 경작하는 부분이 제법 보인다. 가을 추수가 될 즈음에는 산 가운데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어 있다. 전국의 사진가들을 불러 모았던 지리산의 명소는 더는 찾는 이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출처 : 함양군 문화관광]

금대암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035-337



도마마을 다랭이는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이 시대의 건축학도들에게'

건축과 삶

이진경 건축사
신공간 건축사사무소
(충청북도건축사회)



바야흐로 2023년이 밝았다. 설계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교를 떠나 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건축을 향한 열정과 야심찬 포부를 잊을 수가 없다. 건축학도들이 미래를 향한 준비를 교육과정에서 착실히 수학하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의 세계는 건축 혁명·혁신이라

는 단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인문과 공학, 예술을 넘나들며 공부해야 하고, 국내 및 해외의 유명한 건축물들도 탐방해야 한다. 때로는 공모전이나 작품전이 닥칠 때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창작활동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건축설계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는 물론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더불어 여행도 다녀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게 된다.

필자가 보는 건축 현장은 일할 인력이 부족하고, 건축경기는 불황을 맞고 있는 등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미래건축은 세밀화 된 비정형 구

조, BIM, SIMULATION, WORK TROUGH, 3D 가상현실, AI의 건축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 BIM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교육과정이 있고, 업계에서도 현실화 되고 있는 추세다. 현업 건축사들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툴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세계화와 맞물려 글로벌한 건축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고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국내 건축수준이 날로 발전하면서 해외 수주가 활발해 지고 있어 더 많은 공부도 요구된다.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넘쳐나고 건축사사무소의 수도 수위를 넘어서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의 미래를 책임질 건축학도들에게 막중한 현실이 도래하고 있지만, 건축행정은 매

년 까다로워지고 있고, 건축허가에 관해 녹록지 않은 미래도 여전하다. 건축을 위한 서류의 양은 재난과 에너지 문제로 분야별로 매년 추가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란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성 건축사로서 건축학도들에게 희망만을 전하지 못하지만, 건축은 건축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주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과 존재감을 설계자에게 심어준다는 것은 명확하다. 또 건축은 창조를 밑바탕으로 둔 공학이고 미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의 미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학도들이 도맡게 될 것이다.

시로 보는 세상

옹팡집

- 백상웅

어떤 집은 베게처럼 잠을 잔다.
저기 복사꽃 속에 숨은 술집이 그렇다.
집터도 하도 낮아 존재조차 의심스러운
저기 벽돌집은 취해 뒤척이며 잠을 잔다.
나는 그곳에서 취하기 위해 망설였으나
들어가는 손님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게 낡은 벽돌집의 모락인가 싶어,
동료를 끌고 가 주문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 취해도 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바깥에서 안이, 안에서 바깥이 보이기 전에
늦지 않게 거하게 취하고 싶은 때였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복사꽃 헤치며
다리 풀린 노인들이 술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젊었을 때 들어간 손님이 늙어버리게 아닐까?
그럼 나는 뭐하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가.
분명 내가 본 어느 술집의 이야기다.

- 백상웅 시집 '거인을 보았다' 중에서/
창비시선/ 2012

옹팡집은 바람이 많고 토질의 투수성이 좋은 제주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집의 형태다. 보기에 가운데가 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을 표현하는 '옹팡집'이라는 말에서 나온 옹팡집은, 육지에서는 지형의 특징보다는 '아주 심하거나 지독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주로 음식점 이름으로 더 유명한 것 같다. 그만큼 만드는 음식에 고집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시에서 나오는 벽돌집은 그런 옹팡집인데 옹팡집 술집이었나 보다. 젊어 들어간 손님이 늙어야 나오는 걸 보니.
(함성호·시인)

| 발 언 대 |



김수영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레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며칠 전 친한 건축사가 직원을 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도 신입 직원이 1년을 못 채우고 이직을 했다고 한다. 요즘은 직원 눈치 보기 바쁘다고 하소연도 했다.

그러다 '조용한 사직'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됐다. 미국과 영국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 유력 후보로 올랐던 단어라고 한다. 이 말은 실제 퇴사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자신이 맡은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단어이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회사에서 일만 많아진다. 월급은 그대로." "월급은 0.5인분 주면서 일은 2인분 3인분을 요구한다."

이 청년들은 부모처럼 살기 싫어 최고학력과 스펙을 쌓고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부모 세대만큼도 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얼핏 보면 열정이 사라진 청년의 모습 같아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하지만 GDP 성장률이 10%에 달해 미래예측이 분명하고 낙관적이었던 기성세대에 비해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을 마주하게 된 세대는 어릴 때부터 주마다 평가를 받으며 끝없이 경쟁을 해왔기에 그들은 불공정, 불합리에 특히 민감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도박을 걸지 않는다.

이러한 요즘의 흐름이 건축사사무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닌 곳도 있겠지만 소규모 설계사무소 직원은 멀티 플레이어다. 도면은 기본이고 법규검토, 3D모델링, 서류작업, 세움터, 심지어 미팅과 대관업무 맡고 있는 직원도 있다. 말 그대로 월급은 0.5인분 주면서 2인분 3인분을 사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또한 직원 때 그랬었고 우리 사무실 모

두는 에이스야. 너도 에이스로 만들어 줄게 라고 속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어디 출신 건축사, 어느 어느 위원회 위원장 건축사, 공모전을 휩쓸었던 건축사라고 알아봐주지 않는다. 페이와 업무량, 인사에 공정하고 미래를 위해 있을 만 한 곳인지가 중요할 뿐이다.

때론 변화해야 할 게 많은 건축사사무소가 젊은 세대의 눈에서 이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나 또한 MZ세대이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업무대가 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니즈를 모두 충족해 주기 어렵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본다. 뒤쳐진 시스템으로 인해 우리 이미, 조용한 사직을 겪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사직

포토 에세이

만우천변의 상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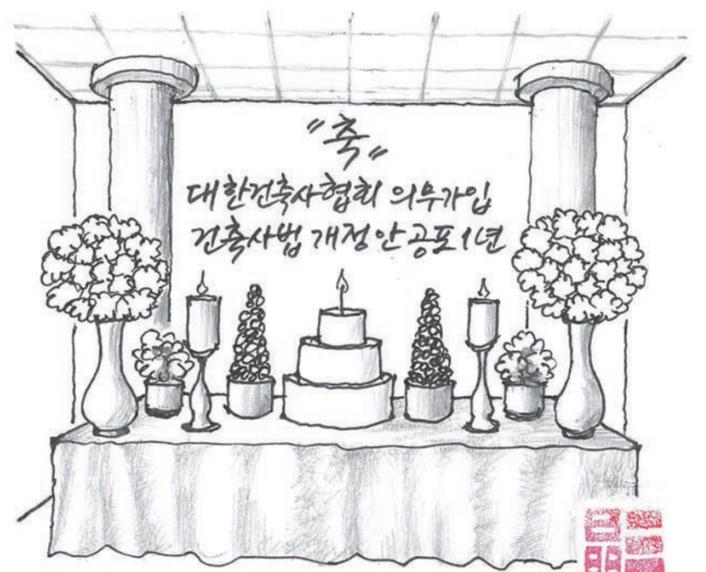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마을로 가는 논두렁길에 눈꽃이 피어있다. 시린 발의 감촉을 느끼며 조심조심 언 길을 걷다가 멈춰서니 양옆으로 하얀 옷을 입고 서있는 겨울나무들과 물안개가 자욱한 만우천이 눈에 들어온다. 너무 추워서인지 철새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고요하다. 추수가 끝난 들판을 하얗게 채색하는 상고대를 보니 겨울바람이 오히려 상쾌하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풍경이다.

정병협 건축사 · 나은 건축사사무소

건축만평

강정삼 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



진정한 設計·監理문화의 첫들을 축하합니다!

14,000부 발행

THE ARCHITECT NEWS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 발행인 석정훈 편집인 겸 편집국장 홍성용 인쇄인 박장희·홍정도

우)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편집출판국 | www.ancnews.kr
안내 및 광고신청 : (02) 3416-6962-6 팩스 : (02) 3415-6899 이메일 : news@kira.or.kr

2006년 9월 9일 창간 / 2009년 5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도09707(주간)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orea Architects Convention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공식후원사



디자인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듭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더 나은 디자인을 고민하여 더 좋은 솔루션을 디자인합니다.



LAYERED CITY SMART / COMPACT / TRANSFER

북정역환승센터복합개발사업 공모 당선작